보수정당 첫 5·18 간담회…'진정성 있는 실천' 뒤따라야

국민의힘 오월 공법 3단체 초청
"5·18은 특정 정당 소유물 아니다"
보상 법률 개정 등 10여개 요청
국힘 의원 전원 42돌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되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반영 등 '진정성이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오월 공법단체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공법단체들이 10여 개의 5·18민주화운동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일부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8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 42주년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소속 의원 전원의 기념식 참석은 물론 보수정당의 5·18 간담회도 이번이 처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민주유공자유족회설립준비위 등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다"며 "5·18은 그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의 소유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회 등 5월 공법단체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세계 어느 곳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국민의힘과 5·18단체가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나, 국민통합을 위한 각오로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아 참배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한발 한발 다가가면서 국민통합의 꿈이 실현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정부에서 공법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와 화합, 5월 정신을 온전히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도 "통합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5·18을 통해서 더욱더 고양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수정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5·18단체들을 국회에서 만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행사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오월 공법단체 관계자들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개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기타 상이 1~2급을 부상자로 포함),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구속석방자 형사보상금 청구), 광주 남구 송하동 5·18학살 영령 추모공원 건립, 서구 북구선거관리사무소 건물 사용 관리 전환, 5·18교육관 연수시설 확장, 5·18정신 세계화 및 세계시민화 추진, 5·18기념재단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오광록·정병호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하반기 국회의장 경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4파전 양상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경선이 일단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의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출마를 고민 중인 김상희 현 국회부의장도 도전장을 던질 경우 5파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표·이상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16일 각각 의장 출마의 뜻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당에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가 찌질한 '좁쌀' 정치를 극복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사이에 건강한 견제와 팽팽한 긴장감이 적절하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겠다. 정파나 계보에 좌지우지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셈이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에) 출마하기로 어제 결심했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결심했다. 의회의 의상을 한번 바꿔 보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의장 출마를 알렸다.

이들 외에 4선 김상희 의원도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명간 출마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 의총 성비위 의혹 박완주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표결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박 의원의 제명 이전에 성 비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의총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박 의원의 입장을 다른 의원이 확인해주는 수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완료하려면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이날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게 됐다.

민주당은 금주 중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선거 '무소속 연대' 시동

단체장·광역의원 13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 연대가 시동을 걸면서 무소속 돌풍이 향후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무소속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들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를 선언했다.

이번 연대에는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순천시장 이영준·여수시장 임영찬·목포시장 박홍률·광양시장 문선용·무안군수 정영덕·화순군수 전완준·영암군수 배용태·영광군수 강종만·신안군수 고봉기·장흥군수 사순문·진도군수 김희수·구례군수 정현택 후보 등 13명이 참여했다. 또 광주시의원 무소속 출마자인 김금림·송형일 후보도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민주당은 기준도 원칙도 없었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촛불 혁명으로 이룬 민주 정부를 5년만에 보수정권에 바치고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정치꾼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가 단합된 힘으로 지역민의 심판을 받아 승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각오를 다진다"면서 "무소속 연대에 지지와 성원으로 망가진 민주당을 곧추세워 다시 희망의 민주당으로 태어나도록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 기초단체장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과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